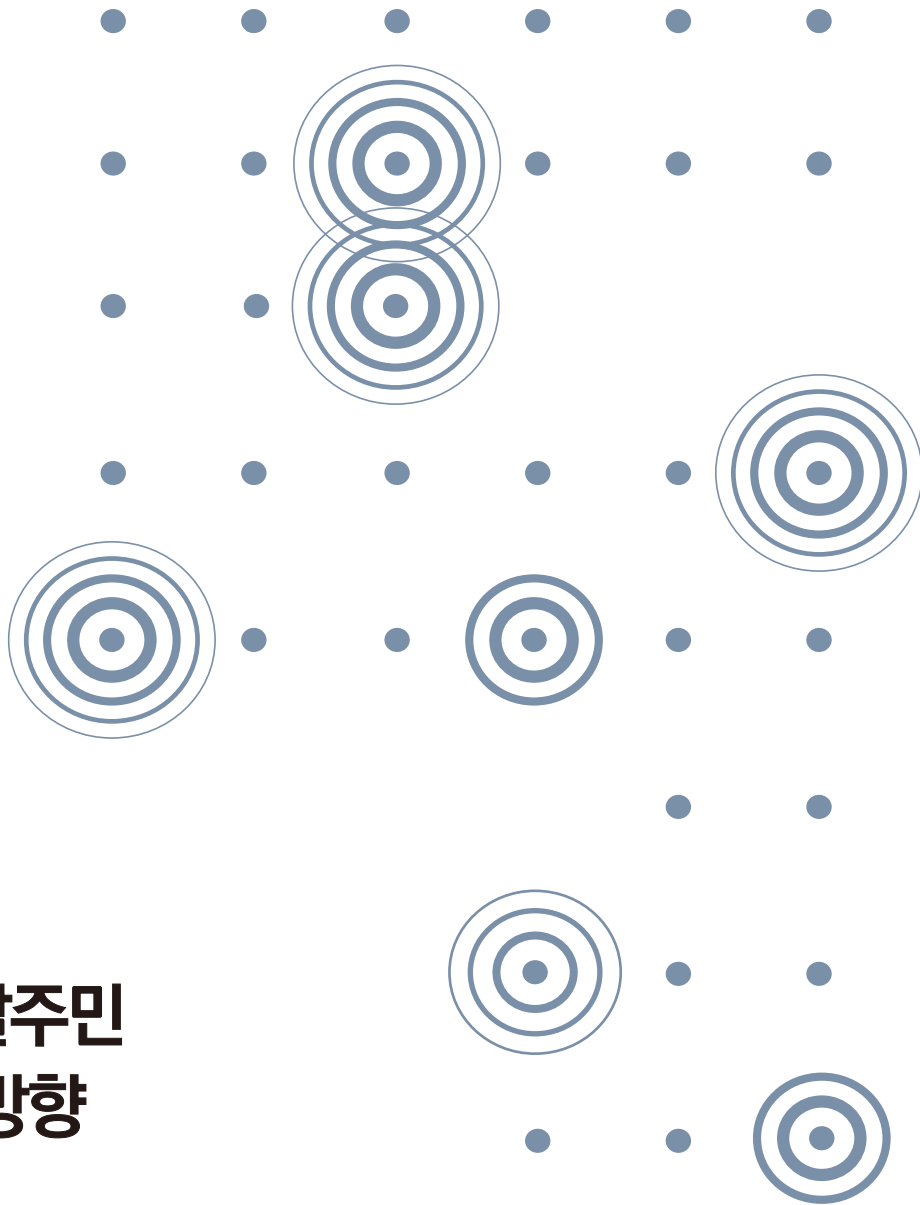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77호 2023. 9. 4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 방향

문인철

연구위원

송미경

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377호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 방향

발행인 박형수

편집인 양재섭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3년 9월 4일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 9. 4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377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 방향

문인철 연구위원
02-2149-1255
mic555@si.re.kr

송미경 연구원
02-2149-1422
meekyong@si.re.kr

요약	3
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4
I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 및 만족도	7
II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화 동향	15
IV. 정책제언	19

요약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난민적 특성을 보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은 법적으로나, 정치·사회적으로나, 남북관계 측면에서 복합적 의미를 지닌 특수성이 있는 존재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과정에서 남북 간의 체제 차이, 사회·경제·문화적 차이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개인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세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을 개선하고, 특히,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서울시민과 전국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정서적·심리적 취약성이 높은 상황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40~50대 비중(45.9%)이 높고, 여성이 다수(68%)이며, 10년 이상 거주자가 88% 이상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 비중이 35.2%, '하나원에 배정받은 집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67.2%로 모두 전국 북한이탈주민보다 높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비율, 실업률도 서울시민, 전국 북한이탈주민보다 높으며 정서적·심리적 취약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실무적 역할에서 성공적 정착을 책임지는 주체적 역할로 전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2013년 서울시 조례 제정 이후 업무가 체계화되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보호담당관' 제도에 따라 보호 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서울시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운영·관리 책임이 있다. 2021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그 역할을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실무적 역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책임지는 주체적 역할로 전환하였다. 2022년에는 종합계획을 9년 만에 전면 개편했고, 현재 이를 수정·보완해 4대 분야 15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지원과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 확대·강화 필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의 개선 방향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제안한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책임을 강조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지원 제공" 분야의 정책 지원을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더욱 정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실제 수요(니즈)에 맞춰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시는 자체적 정서적·심리적 취약·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지표 개발과 정부 및 민간, 기초 자치구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취약·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 제공과 종합적 대책 마련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I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난민적 특성을 보이는 대한민국 국민

북한이탈주민은 법적, 정치·사회적, 남북관계적으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특수성 존재

- 2022년 12월 기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3,882명
 - 사망, 말소, 이민, 거주불명,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을 제외한 거주자는 총 31,365명
 - 남성 9,510명, 여성 24,372명
 - 이 중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6,595명으로 남성 2,047명, 여성 4,548명
 - 경기도(10,902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고, 단일 도시로는 가장 많이 거주
- 북한이탈주민은 한민족이자 국가관계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
 - 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보이는 다문화·난민적 특성이 존재
 - 국가관계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한 외국인 혹은 귀화자로 국제법상 난민 개념에 근접
 - 국제법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정치적 박해와 폭력, 극심한 사회적 통제, 경제적 빈곤, 인권 유린, 자유의 억압을 피할 목적으로 북한을 떠난 타국의 보호를 요청한 사람이기 때문
 - 한국의 「난민법」에 비춰봐도 북한이탈주민은 상당 부분 난민 성격을 보유¹⁾
 - 민족과 국내법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이 아닌 우리 국민이며 한민족
 -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우리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님
 -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은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며, 분단의 아픔, 통일의 필요성, 북한 체제의 심각한 현실 등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

1) 난민법 제2조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

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또는 완화)와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세심한 배려·관심·지원 필요

‘북한이탈주민’ 용어를 둘러싼 계속된 논쟁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지속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용어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 초기 북한이탈주민은 귀순자로 지칭되며 남한 사회 환영의 의미로 사용하다 점차 귀순용사, 귀순 동포, 월남자, 탈북주민, 탈북자 등 다양하게 지칭
 - 이 중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것이 주는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 또한 가장 큰 표현
 - 의존명사인 ‘자(者)’는 보통 범죄자, 살인자, 중독자, 위선자, 배신자 등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
- 정부 주도로 순화된 표현인 ‘새터민’ 단어가 등장했지만, 오히려 북한이탈주민 사회가 이를 거부
 - 새터민은 순 한국말로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사회는 이 용어에 부정적인 반응 표출
 -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의 의견 반영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비판 증대
 - 새터민이라는 의미는 북한이탈주민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며, 또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계속해서 사용하기 어렵고, 특히,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새로운 단어 도입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지우려 한다는 비판 증대
 - 현재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 혹은 그 줄임말로 ‘탈북민’ 사용
-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편견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법률 용어인 북한이탈주민도 ‘이탈’과 ‘탈북’에서 오는 부정적 어감이 그대로 존재
 - 상당수 북한이탈주민은 ‘이탈주민’이 ‘부적응자’의 느낌을 준다고 불만을 표시
 - 여전히 탈북자나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무비판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비하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특정 민족, 인종, 국민, 사회적 계층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함
 - 최근 학계, 민간단체, 지자체 등에서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 감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 예를 들어, 새꿈주민, 윗동네 아랫동네 주민, 북한이주민, 이주자, 북한이탈자, 통일인, 북향민 등
 - 명칭을 정하는 문제는 대상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대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새로운 용어 사용 시도는 차별과 편견의 사회 인식을 나타내는 지점

체제 및 사회·경제·문화적 차이로 상당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은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지만 사회·문화 및 정서·심리적 문제로 정착의 어려움 존재
 -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이후에도 탈북과 입국(이주)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존재
 - 북한이나 중국 등 제3국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불안·고통과 경제적 부담 존재
 - 북한식 표현과 말씨,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차별·무시 등 사회적 편견·배제 존재
-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정착의 어려움은 다문화 가정이나 난민, 국내 취약계층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는 다른 특징 존재
 -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이나 다문화 가정과의 경험적 유사성이 크지만, 언어나 인종, 민족적 문제에서 차이 존재
 -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역시 난민과 다문화 가정과 같이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겪으면서도 남한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요되는 복합적 어려움이 존재
 -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 특성은 초기의 정착과 이후의 자립에서 난민이나 다문화 가정, 국내 취약계층보다 더 큰 취약성 존재
 - 따라서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자활,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해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 필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통일 수도 서울의 미래상과 인권 도시 서울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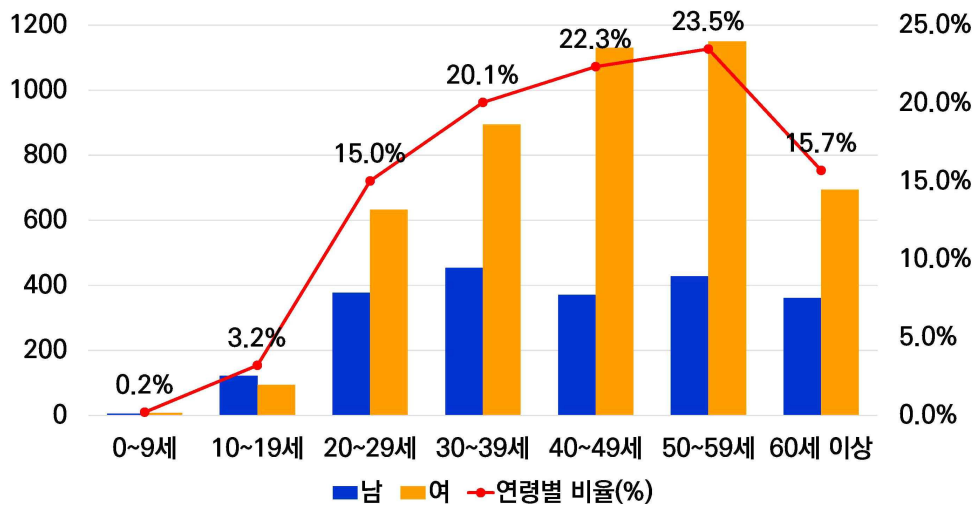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취약한 개인의 자립·자활을 돕는 차원을 넘어 통일과 인권 실현의 문제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립·자활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미래의 통일한국, 미래의 통일 수도 서울의 미래상과 관련된 사항
 -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인권 개선의 실현과 밀접한 문제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약자와의 동행 정책'으로서 복합적이며 다각적인 관심 필요
 -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임
 - 국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난민과 인권 문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인권 도시로서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됨

I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 및 만족도

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과 인구변화

서울에 거주하는 6,723명, 40~50대 비중이 높고, 다수가 10년 이상 거주

- 2022년 3월 기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40~50대 비중이 높은 역 항아리 구조이며 여성이 다수²⁾
 - 0~19세 이하 230명(3.4%), 20~30대 청년층 2,358명(35.1%), 40~50대 중장년층 3,080명(45.85%), 60대 이상 1,055명(15.7%)
 - 여성이 4,604명(68%), 남성이 2,119명(32%)이며, 특히 40~50대 여성이 1/3(2,281명, 33.9%)을 차지



주: 하나넷 시스템에 입력된 거주지 기준으로 사망, 말소, 이민, 거주 불명,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 제외

자료: 서울시 거주지담당관이 하나넷 시스템에서 추출한 지역별 거주 현황을 재가공해 산출

[그림 1]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대별 인구와 비율(2022년 3월 말 기준)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는 양천구(1,041명), 노원구(1,034명), 강서구(917명) 등 3개 구로 44.5% 차지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인구는 2000년 511명에서 2005년 2,521명, 2010년 5,460명, 2020년 7,085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 중³⁾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비중은 2000년 36.3%, 2005년 35.6%, 2010년 30.2%, 2020년 22.7%⁴⁾

2) 서울시 거주지담당관이 하나넷 시스템에서 추출해 제공한 지역별 거주 현황을 저자가 재가공. 통일부 통계 자료는 서울시민의 연령별 거주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3)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 변화 추이는 서울시에서 접근가능한 하나넷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정보를 추출하기 어려워 2차 자료인 기존 연구자료와 서울시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가공하였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2022.3.31.,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 서울시 행정국(자치행정과), 2017.6,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계획 수립(안)」;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조사보고서」; 김귀영, 2012.9.6.,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을 위한 서울시 지원방안」(서울: 서울연구원); 김영호, 2005, 「서울시 거주 새터민 정착실태 분석과 정착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표 1] 자치구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2022년 3월 말 기준)

(단위: 명, %)

자치구	노원	양천	강서	송파	관악	구로	강남	금천	마포
남	308	337	310	121	94	111	103	65	59
여	726	704	607	242	242	200	173	168	143
거주	1,034	1,041	917	363	336	311	276	233	202
비율	15.4	15.5	13.6	5.4	5.0	4.6	4.1	3.5	3.0
자치구	강북	동작	동대문	종로	서대문	강동	도봉	성북	영등포
남	54	53	41	50	54	46	44	49	41
여	133	129	145	115	105	97	106	100	99
거주	187	182	186	165	159	143	150	149	140
비율	2.8	2.7	2.8	2.5	2.4	2.1	2.2	2.2	2.1
자치구	성동	서초	은평	중구	용산	광진	종로	총계	
남	20	41	35	19	22	25	17	2,119	
여	89	65	76	50	34	36	20	4,604	
거주	109	106	111	69	56	61	37	6,723	
비율	1.6	1.6	1.7	1.0	0.8	0.9	0.6	100	

주: 사망, 말소, 이민, 거주 불명,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 제외

자료: 서울시 거주지담당관이 하나넷 시스템에서 추출한 지역별 거주 현황 재가공

[표 2] 서울시 자치구별 북한이탈주민 정착 인구 변화

(단위: 명)

자치구	노원	양천	강서	송파	관악	구로	강남	금천	마포
2005.6.31	650	690	408	161	16	35	111	11	16
2012.5.31	1,002	1,127	918	337	306	207	213	178	148
2021.10.31	1,076	1,056	941	358	345	314	272	235	202
2022.3.31	1,034	1,041	917	363	336	311	276	233	202
자치구	강북	동작	동대문	종로	강동	성북	기타 10개	총계	
2005.6.31	19	17	30	73	9	13	145	2,404	
2012.5.31	263	113	216	155	112	104	568	5,967	
2021.10.31	199	187	184	164	156	144	1,003	6,836	
2022.3.31	187	182	186	165	143	149	998	6,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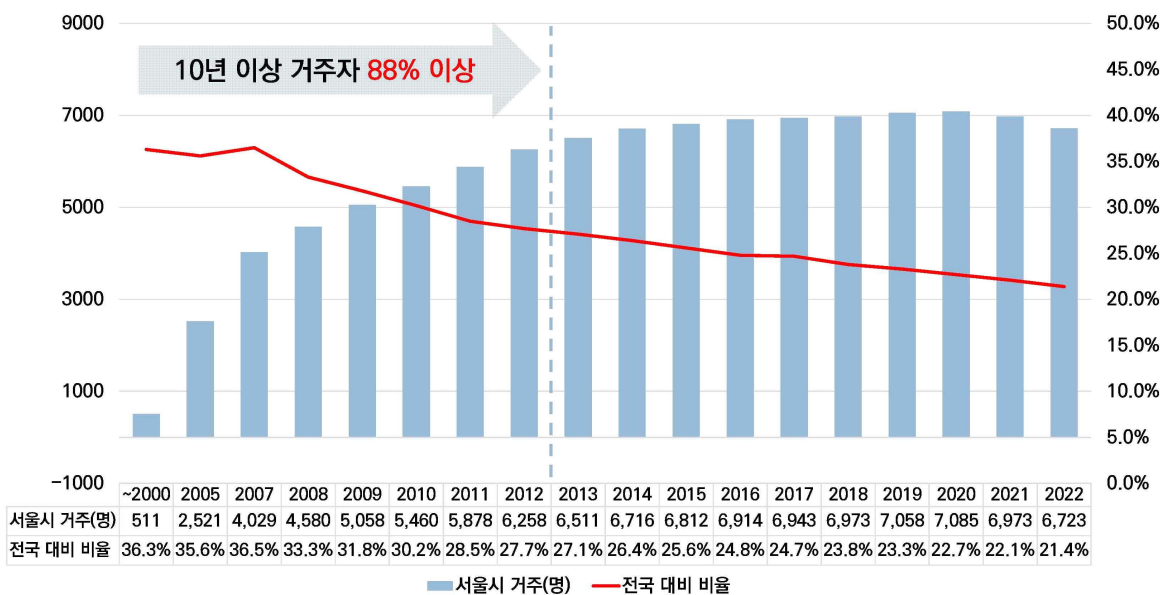
주1: 사망, 말소, 이민, 거주 불명,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 제외

주2: 자치구별 정착 인구 변화 추이는 자치구별 인구에 대한 과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2005년 6월 말 북한이탈주민 자치구별 현황과 2012년 5월 말 북한이탈주민 자치구별 현황, 서울시 보고자료에서 확인된 2021년 10월 말 북한이탈주민 자치구별 현황, 그리고 2022년 3월 말 북한이탈주민 자치구별 현황을 비교하여 그동안의 지역구별 정착 현황을 정리

자료: 서울시 하나넷시스템, "지역별 거주현황"(2022.3.31.); 서울시, 2022.3,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김귀영, 2012.9.6.,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을 위한 서울시 지원방안」, 서울연구원; 김영호, 2005, 「서울시 거주 새터민 정착실태 분석과 정착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서울연구원 데이터 저자 재가공

- 4)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률이 감소하기 시작한 초기요인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방분산 정책(지방거주 장려금 제도)이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임. 반면, 최근 서울시 인구 유출 요인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수도권 외곽 이주 현상, 재건축 등의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서울시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88.3%인 6,258명으로 다수를 차지)
 - 기존 정착민의 타 시도 이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술적 추정에 따르면, 서울시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88.3%인 6,258명
 -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서울시에 5년 이상~10년 이하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9.7%로 68명, 5년 이하는 2.0%로 142명
 - 한편,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입국 시기에 따른 전국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기간은 10년 이상이 72.7%로 24,608명
 - 5년 이상~10년 이하는 19.9%로 6,731명, 5년 이하는 7.4%로 2,487명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시기별 거주인구로 정착 기간을 추정된 결과와 입국 시기에 따른 전국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기간을 비교하면, 정착 기간이 10년 이상인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거주자 비중은 전국보다 15.6%p 높음
 - 5년 이상~10년 이하는 10.2%p 높고, 5년 이하는 5.4%p 낮음



주1: 사망, 말소, 이민, 거주 불명,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 제외

주2: 2015년은 10월 말 기준, 2017~2021년은 3월 말 기준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2022.3.31.,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 서울시 행정국(자치행정과), 2017.6, 「북한이탈주민 종합 지원계획 수립(안)」;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조사보고서」; 김귀영, 2012.9.6., 「북한이탈주민 사회 정착을 위한 서울시 지원방안」, 서울연구원; 김영호, 2005, 「서울시 거주 새터민 정착실태 분석과 정착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서울연구원 데이터 저자 가공

[그림 2]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인구변화

5) 기존 정착민의 타 시도 이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술적 추정치임. 계산방식: 10년 이상(2012년 인구 ÷ 2020년 인구(최고점 인구)), 5년 이상~10년 미만(2013년~2017년 전년 대비 증감인구의 합 ÷ 2020년 인구(최고점 인구)), 5년 미만(2018~2020년 전년 대비 증감인구의 합 ÷ 2020년 인구(최고점 인구))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다수가 임대아파트에 거주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전국 북한이탈주민, 일반 국민, 서울시민보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상황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1인 가구는 35.2%, 2인 가구는 27.4%, 3인 가구는 21%, 4인 가구는 13.9%, 5인 이상 가구는 2.6%
 - 일반 서울시민과 비교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1인 가구 비중은 0.3%p 높은 수준
 - 전국 북한이탈주민과 비교하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1인 가구 비중은 2.4%p 높은 수준

[표 3]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가구의 가구원 수 비중 비교(서울시, 전국)

구분	북한이탈주민(2021년 기준) ¹⁾		전 국민(2020년 기준) ²⁾	
	서울시(%)	전국(%)	서울시(%)	전국(%)
1인 가구	35.2	32.8	34.9	31.7
2인 가구	27.4	28.6	26.0	28.0
3인 가구	21	22.4	19.9	20.1
4인 가구	13.9	12.6	15.1	15.6
5인 이상 가구	2.6	3.6	4.1	4.5

주1: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isticsList>)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가구원수

주2: 통계청, 2020, 「인구총조사」, 가구원수/취업자수별 가구(15세 이상, 일반가구)-시군구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isticsList>)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가구원수, 「인구총조사」 가구원수/취업자수별 가구(15세 이상, 일반가구)-시군구 데이터 저자 가공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전국 북한이탈주민보다 높은 상황
 - 2021년 기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배정받은 집 또는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67.2%
 - 반면,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비중은 6.9%에 불과
 - 이를 전국 북한이탈주민과 비교하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9.3%p 높고, 자기 소유 거주 비율은 11.3%p 낮은 상황

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생계·의료급여 수급 비율은 전국 북한이탈주민, 일반 서울시민보다 높은 수준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자는 총 1,907명이며, 수급 비율은 26.9%(2022년 3월 기준)⁶⁾
 - 남성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 비율은 16.4%(대상 인원 2,311명 중 387명)
 - 여성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 비율은 32.0%(대상 인원 4,776명 중 1,529명)
 - 지난 5년간 생계급여 수급 인원을 보면, 남성은 감소세를 보이고, 여성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2021년 기준, 전국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 비율은 22.8%로 동년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33.3%) 수급 비율이 5.1%p 높았음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2,745명이며 수급 비율은 38.7%(2022년 3월 기준)
 - 남성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 수급 비율은 26.5%(대상 인원 2,311명 중 613명)
 - 여성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수급 비율은 44.6%(대상 인원 4,776명 중 2,132명)
 - 일반 서울시민의 의료급여 수급 비율은 2%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보다 -36.7%p 낮은 수준임

[표 4]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 인원과 비율(2022.3)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대상인원	7,359	7,422	7,453	7,346	7,087
	수급인원	2,003	2,054	2,078	2,042	1,907
	수급비율	27.2%	27.7%	27.9%	27.8%	26.9%
남성	대상인원	2,481	2,456	2,433	2,390	2,311
	수급인원	422	404	404	393	378
	수급비율	17.0%	16.4%	16.6%	16.4%	16.4%
여성	대상인원	4,878	4,966	5,020	4,956	4,776
	수급인원	1,581	1,650	1,674	1,649	1,529
	수급비율	32.4%	33.2%	33.3%	33.3%	32.0%

주1: 대상인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서울시에 거주자가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불명자, 말소자 등을 포함하며, 사망자, 이민자, 보호시설수용자는 제외)

주2: 수급비율: 수급인원 ÷ 대상인원

자료: 서울시 하나넷시스템,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지역별/성별)” 2018~2022(각년도 3월 기준) 재가공

6)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지역별/성별)”은 서울시 하나넷 시스템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년도 3월 기준으로 추출한 자료임. 이 자료는 지역별, 성별에 따른 대상 인원과 급여 종류별 수급 인원 정보를 제공. 대상 인원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수를 의미하며, 서울시에 거주자가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거주지 불명자, 말소자 등도 포함. 사망자, 이민자, 보호시설 수용자는 대상 인원에서 제외. 수급 인원은 급여 종류별 수급 신청 인원이며, 수급 비율은 대상 인원이 되는 북한이탈주민 중 급여 종류별 실제 수급 인원의 비중임

[표 5]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수급 인원과 비율(2022.3)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대상인원	7,359	7,422	7,453	7,346	7,087
	수급인원	2,751	2,772	3,074	3,013	2,745
	수급비율	37.4%	37.3%	41.2%	41.0%	38.7%
남성	대상인원	2,481	2,456	2,433	2,390	2,311
	수급인원	656	630	701	671	613
	수급비율	26.4%	25.7%	28.8%	28.1%	26.5%
여성	대상인원	4,878	4,966	5,020	4,956	4,776
	수급인원	2,095	2,142	2,373	2,342	2,132
	수급비율	42.9%	43.1%	47.3%	47.3%	44.6%

주1: 대상인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서울시에 거주자가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불명자, 말소자 등을 포함하며, 사망자, 이민자, 보호시설수용자는 제외)

주2: 수급비율: 수급인원 ÷ 대상인원

자료: 서울시 하나넷시스템,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지역별/성별)" 2018~2022(각년도 3월) 저자 가공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서울시민과 전국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실업률 높고, 고용률 낮아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3.4%, 실업률은 8.8%(2021년 기준)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6%, 비경제활동비율은 41.4%
 - 전국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3%, 비경제활동비율은 38.7%, 고용률은 56.7%, 실업률은 7.5%
 - 일반 서울시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3%, 비경제활동비율은 37.7%, 고용률은 59.2%, 실업률은 4.8%
- 취업자가 없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가구 비율은 35.2%(2021년 기준)로 전국 북한이탈주민보다 6.2%p 높은 수준
 - 취업자가 없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가구 비율은 2017년 28.9%에서 2021년 35.2%로 대폭 증가
 - 2020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서 취업자가 없는 가구는 서울시가 21.3%, 전국이 21.7%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13.9%p, 13.5%p 높은 상황

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만족 수준

남한 사회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하층’과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85.2%는 본인의 지위를 하층(중하층+하층+최하층)이라고 인식
 - 2021년 기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34%
 -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38.8%
 - 특히, ‘최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5%
 - ‘최상층’은 0.8%, ‘상층’은 1.6%
- 반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2021년 기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는 59.5%(매우 만족+만족)로 전국 북한이탈주민보다 5.1%p 높은 수준
 - 2019년과 비교하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2.9%p, ‘만족하는 편’이 3.7%p 상승

[표 6] 서울시 및 전국 북한이탈주민 남한의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

구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전국 북한이탈주민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보통	불만족하는 편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보통	불만족하는 편	매우 불만족
2019년	9.1	43.8	39.9	6.1	1.1	10.7	43.7	37.9	6.4	1.2
2020년	11.2	44.1	37.9	5.4	1.4	12.6	42.3	39.7	4.7	0.8
2021년	12	47.5	34.2	5.1	1.2	9.1	45.6	38.6	5.6	1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isticsList>)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 데이터 저자 가공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심리적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중 자살 충동을 경험한 비중은 전국 북한이탈주민보다 높은 수준
 - 2017~2021년 5년 평균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자살 충동 경험은 13.8%
 - 동 기간 평균 전국 북한이탈주민의 자살 충동 경험은 13.4%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보다 0.4%p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전체 자살 충동 경험 비중이 5.2%(2020년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2배 이상 높은 수준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자살 충동 경험의 주요 원인은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장애, 경제적 어려움
 - 5년 평균(2017~2021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자살 충동 경험의 원인은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장애’가 31.3%로 가장 높았음

- 두 번째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28.2%, 세 번째는 '외로움과 고독'으로 16.5%를 차지
- 한편,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의 자살 충동 경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38.2%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 '외로움, 고독', '가정불화', '직장', '학교성적' 순

[표 7] 서울시 및 전국 북한이탈주민 자살 충동 경험 이유

구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전국 북한이탈주민(%)						전국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2020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 때문에	39	26.7	35.5	26.9	28.3	31.28	26.6	23.3	31.8	29.1	25.8	27.32	19.0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6.3	34.5	23.7	44.2	22.5	28.24	29.2	29.8	23.5	28.5	26.8	27.56	38.2	
외로움, 고독 때문에	16.9	28.6	8	13.6	15.2	16.46	15	20.7	14.5	16.8	16.4	16.68	13.4	
가정불화로 인해	8.2	1.1	17.2	4	15.5	9.2	14	10.8	16.7	10.6	11.6	12.74	11.9	
직장 문제 때문에 (실직, 미취업 등)	6	0.7	3	3.5	3.4	3.32	3.5	1.3	2.5	4.5	2.3	2.82	8.7	
이성 문제가 원만치 않아서 (실연, 파혼 등)	1.1	1.3	2.2	0.7	1	1.26	1.4	3	3.1	3.8	1.4	2.54	3.1	
친구나 동료들과의 불화 및 따돌림 때문에	1.3	3.3	2.8	0	1	1.68	1.8	3.1	2.7	1.1	2.9	2.32	1.7	
학교 성적, 진학 문제 때문에	5.6	3.9	0.6	0	1.5	2.32	2.3	1	0.4	0.7	2.2	1.32	2.3	
기타	5.6	0	7.1	7.2	11.6	6.3	6.1	7	5	5	10.6	6.74	1.7	

주: 2018~2022년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및 사회조사의 데이터를 저자 가공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isticsList>)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는 전국 북한이탈주민보다 약간 높지만 큰 차이 없어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는 전국 북한이탈주민보다 약간 높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
 - 5년 평균(2017~2021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는 75.6%(매우 만족 +만족)로 전국 북한이탈주민 74.6%보다 1%p 높은 수준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 만족한 이유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34.5%)'와 '북한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23.3%)'를 가장 많이 선택

[표 8] 서울시 및 전국 북한이탈주민 남한 생활 만족도(%)

구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전국 북한이탈주민				
	매우 만족	만족 하는 편	보통	불만족 하는 편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만족 하는 편	보통	불만족 하는 편	매우 불만족
2017년	20.9	53.3	22.4	2.8	0.7	23.4	50.2	22.7	2.4	1.3
2018년	20	50.7	24.8	2.9	1.6	23.1	49.4	23.7	2.4	1.4
2019년	23.3	51.5	23.1	1.4	0.7	25.4	48.8	23.5	1.5	0.7
2020년	26.3	53.1	19.7	0.9	0	28.3	48.1	21.6	1.4	0.5
2021년	28.7	50.3	17.2	2.8	1.1	26	50.5	20.9	1.8	0.7
평균	23.84	51.78	21.44	2.16	0.82	25.24	49.4	22.48	1.9	0.92

주: 2018~2022년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데이터를 저자 가공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isticsList>)

Ⅲ.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화 동향

Ⅰ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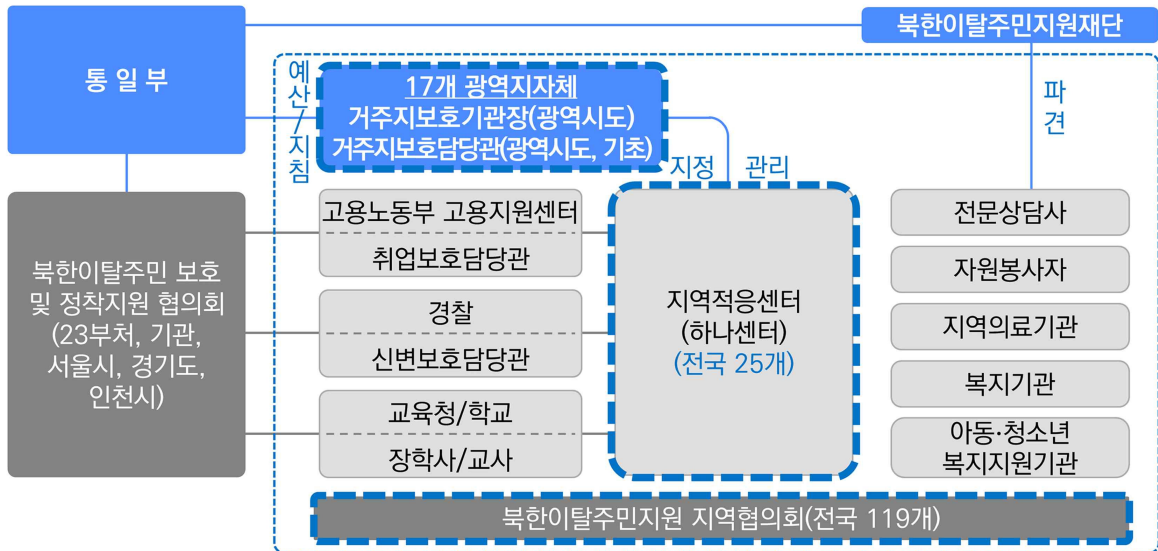
2013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 업무가 체계화되기 시작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는 크게 7가지로 체계화
 -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
 - 둘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
 - 셋째,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 넷째,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활동의 행·재정적 지원
 -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의 우선구매·재정지원·세금 감면 등 혜택 제공
 -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업무 위임과 위탁하는 자치구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지역 적응센터 등) 사업비 지원·지도·감독
 - 일곱째, 북한이탈주민 지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포상

‘보호담당관’ 제도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현장 업무 수행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보호 대상자의 거주지보호 업무 수행
 -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업무는 기관장과 부서, 개인의 인식, 의지에 따라 수행 역할과 범위에 따라 편차 존재
 - 또한, 자치구별 업무 중요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정보 수준,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수에 따라서도 업무 편차 존재
 - 그러나 공통적으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은 ‘하나넷 시스템’을 이용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거주지보호대장 작성·관리, 반기별 변동사항 보고를 수행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관은 2010년 도입된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운영과 관리 책임 보유
 - 자치구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서울시와 지역협의회를 운영
 - 자치구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서울시와 함께 지역협의회를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시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서울시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교부신청에 의거 운영보조금의 분기별 지급, 보조금 운영 및 사업 운영현황 점검과 지도(수시), 분기별 운영현황 보고서 검토 후 통일부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
 -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법 제15의2에 따라 지역적응센터 위탁기관을 지정해 사업비 관리 담당

- 현재 서울시 지역적응센터는 동부·서부·남부·북부 등 4개의 민간기관을 위탁·운영
-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관련 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실무를 담당
- 지역적응센터의 예산과 지침은 통일부에서 결정하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인건비 관리 및 인력 파견, 서울시는 위탁기관 지정과 사업비 관리만 담당



자료: 통일부, 2021.10.,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36을 바탕으로 수정

[그림 3]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정착지원체계도

2021년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실무적 역할에서 주체적 역할로 전환

- 2021년 1월 5일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도 보호대상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적 책무 부여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2021년 3월 25일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 개정
 -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는 것으로 변화
 - 또한,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 추진”이 삭제
 - 대신,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

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계획

2013년 지자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계획’ 수립

- 서울시는 2013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종합계획 수립·발표
 - 이 계획은 서울시가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첫 종합대책으로 ‘조기 정착 지원’이 핵심
 - ‘최초 전입자 환영’, ‘안정적 정착 인프라 구축’, ‘자립·자활 기반 제공’, ‘북한이탈주민 이해 제고’, ‘제도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등 5대 과제의 2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
- 2013년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는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서울시민되기 길라잡이(생활 안내, 청사 투어, 문화 체험), 기초생활 물품 지원(60만 원 상당) 등 생활 기반(신규전입) 지원
 - 치과, A형 간염예방, 심리치료(알코올중독, 우울증 등) 등 의료지원
 - 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평가, 취업교육 지원(우선선발 제도), 직장 힐링프로그램(공공기관 근무자) 등 취업/교육지원
 - 1박 2일 남한가정 체험, 북한이탈주민 우수 정착 사례 발표 등 문화 격차 해소 지원
 -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관기관 워크숍, 지역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 기관협력
 - 어린이집 우선입소자격 부여, 북한이탈주민 용어 개선 건의 등 제도개선

2022년, 서울시는 9년 만에 개편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발표

- 2022년 2월 21일 서울시는 ‘서울에 먼저 온 작은 통일 만들기’라는 부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발표
 -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종합계획의 ‘비전’은 ‘북한이탈주민과 마음 하나 되는 따뜻한 하나’, ‘목표’는 ‘통일 미래를 지향하는 서울시민으로의 안착’으로 설정
 - ‘기본방향’은 ‘북한이탈주민 수요 중심의 조기 정착지원 및 건강한 자립 기반 구축’, ‘남북주민 화합·소통 활성화를 통한 내부로부터의 통일환경 조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효율화를 위한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강화’로 설정
 -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5대 분야의 20개 사업 계획
 - 첫 번째 분야: 생활 밀착 정착 서비스 지원 확대
 - 두 번째 분야: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 세 번째 분야: 일자리 확대로 힘이 되는 자립·자활 지원
 - 네 번째 분야: 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다섯 번째 분야: 지원 기반 및 협력체계 강화

2023년 초, 서울시는 4대 분야 15개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수정

- 2023년 3월 말, 서울시는 '서울에부터 작은 통일 만들기'로 부제를 수정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 계획' 수정안 수립
 - 서울시는 단편적 정착지원을 넘어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설정
 - 계획의 방향은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제고
 - 서울시는 5대 분야의 20개 사업에서 4대 분야 15개 사업으로 수정
 - 첫 번째 분야: 생활 밀착 정착 서비스 지원 확대 → 생활 밀착 서비스 지원
 - 두 번째 분야: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 세 번째 분야: 일자리 확대로 힘이 되는 자립·자활 지원 → 자립·자활 지원
 - 네 번째 분야: 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지원 기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료: 서울시 남북협력과 자료(2023)

[그림 4] 2022년과 2023년도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IV. 정책제언

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사업 확대 및 강화 필요

정책 수요를 고려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종합계획 추진 및 개선

- 서울시는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 선별 및 니즈 반영 사업 확대·강화', '정서적·심리적 취약·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추진
 - 정부의 202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점 추진 방향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 특히 정착지원 체계 개선에서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 강조
 -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사업을 발굴 및 확대·강화하고, 계속해서 정부·민간·기초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사업 확대 및 발굴을 통해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 첫째, 취·창업 지원사업 확대·강화
 -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에 북한이탈주민 채용 특별장려금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채용 유인도 필요
 - 북한이탈주민이 '더 나은 남한 생활에 필요한 지원'으로 취·창업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
 - 창업에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 견학, 단기 인턴, 특강' 사업 추진
 -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연계한 취업 교육 추진
 - 취업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보험사기, 무분별한 보험 가입 방지, 안정적 자산 관리 및 증식, 노후 자금 마련 등을 위한 금융교육 지원
- 둘째, 정서적·심리적 안정 및 건강 지원사업 확대·강화
 - 서울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직접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 연계 필요
 -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은 일반 시민과 비교해 더욱 취약한 상황(2022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11.9%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지만 일반 국민은 5.7%에 불과)
 - 서울시는 지정된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트라우마 상담 바우처 제공 방안 고려 필요
 - 또한, 가정불화를 겪고 있거나 미적응자 혹은 부적응자의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및 회복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쉼터' 마련과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부부상담 지원사업 추진 모색 필요

- 셋째,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업 추진
 - 서울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대상 온라인 직업 교육 추진 필요
 -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남성보다 약 2.5배 많은 상황이지만, 여성이라는 것과 학력 수준, 양육 담당 등으로 고용률은 낮은 상황(2022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고용률 74.8%, 여성 고용률 54.1%)
 - 서울시는 특정 요일에만 진행되는 탈북 여성 집중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필요
 - 또한, 저학력 여성의 학력 증진을 위해 검정고시 학습지원, 2·3년제 전문대학 입학 상담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사업과 학습 중도 이탈을 위한 대학 및 공공기관 연계 근로 장학생 지원사업 추진 필요

- 넷째,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노후 준비를 돕는 관련 사업 추진
 - 서울시는 노인 북한이탈주민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 필요
 - 2022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절반 이상인 52.1%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음(일반 국민은 32.6%)
 - 서울시는 중·장년층 북한이탈주민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노후준비통장' 사업 추진 필요

- 다섯째, 국어 및 응변 교육과 영어 교육 지원사업 추진
 -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국어 교육과 말하기 교육, 영어 교육 사업 등을 추진·강화할 필요
 - 2022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19.5%가 차별과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전년 대비 3.4%p 증가(차별과 무시의 이유로 75.0%가 '문화적 소통방식의 차이'와 44.2%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20.4%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 부족'을 언급)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말투와 억양으로 차별을 경험하거나 일반국민과의 대화에 위축되는 경향이 존재(또한, 일상화된 영어의 이해 부족으로 대화와 업무에 차질을 경험)

-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정서적·심리적 취약·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지표 개발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는 상시적인 정서적·심리적 취약·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지표 개발과 정부 및 민간, 기초 자치구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북한이탈주민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포함된 상황
 - 현재 보건복지부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위기가구지표'를 계속해서 보완 중 (2021년 말 기준 32종에서 2022년 33종, 2023년 현재 39종이며, 올해 12월부터 44종으로 늘릴 계획)

- 그러나 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 정보는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다양한 정서적·심리적 취약성을 온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 존재
- 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 정보는 의료비 과다 지출 정보,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객관적 파악이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하기 때문
-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위기 정보 파악은 객관적 정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 등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이 수반되어야 가능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